

사회양극화와 젠더민주주의: 촛불집회에 대한 하나의 해석*

최 명 익 | 한신대학교

이 글은 2008년 대규모 촛불시위를 통한 새로운 대중적 저항운동의 등장은 어느 날 갑자기 돌출된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내적 변화를 통해 예비되었고, 그 가운데 젠더민주주의 경향이 향후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을 규정하는 데 있어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주장한다. 우리가 인식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상관없이, 광우병 감염 위험이 의심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촛불시위는 국민 보건과 위생의 권리와 관련, 정치적 정당성과 민주주의를 규정하는 의제에 있어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젠더란 일종의 사회관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젠더관계가 촛불집회를 경유해서야 비로소 한국사회에 출현했다는 것은 아니며, 이전의 한국 민주화과정에서 그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민주주의의 성격이다. 촛불집회 이전의 민주화 과정에서, 젠더관계는 독자적 형태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채, 타자의 시선, 곧 가부장주의나 국가 그리고 시장자본주의에 의해 규정된 민주주의를 자기의 그것과 동일시했다. 하지만 촛불집회를 젠더관계가 주도적으로 규정함에 의해서 민주주의의 의미는 보다 풍부해지고 다성적 목소리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한에서 촛불집회는 세계사적 사건이다.

주제어: 젠더민주주의, 촛불집회, 사회양극화, 집단지성, 생활정치, 젠더관계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I. 서론

한국사회에서 사회양극화는 이제 더 이상 생소한 말이 아니다. 그만큼 불평등 증대를 실제 몸으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소위 사회양극화 '론'은 과연 최근의 사회양극화 현상에 대해 적절히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이 글은 한국사회에서 지난 10년간 전개된 일련의 정치 혹은 사회경제적 변화과정을 기존의 '사회양극화론'이 과연 적실하고 설득력 있게 지적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한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사회양극화 '론'이 사회양극화의 결과에 주목할 뿐, 사회양극화를 발생시킨 원인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비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양극화라는 용어를 계속 쓰는 이유는 그 말이 보편화되어 있고, 어찌됐든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빈곤 증대로부터 발생하는 정치사회적 균열현상을 통칭하는 의미로 널리 쓰여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사회양극화에 대한 종래의 의미에 더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20:80 사회론'과 같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증대 현상에 주목하는 단순한 사회양극화론만으로는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의 동태적 변화양상, 특히 이명박 정권의 등장과정이나 2008년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시위 등에 대해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양극화를 자본주의적 공리계에 포섭된 계급, 계층 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혹은 의식적으로 자본주의적 공리계에 저항하는 계급, 계층 간의 양극화 과정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사회양극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명박 정권의 등장과정은 1987년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진보를 규정해 온 민주적 대중, 곧 구(舊) 데모스들의 해체와 이들 대부분이 자본주의적 공리계로 포섭된 결과 발생한 사건으로 그 자체로 기존 한국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을 반영한다.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는 이러한 자본주의적 공리계로의 실질적 포섭에 대한 안티테제에 해당한다.

이 글은 바로 그러한 안티테제, 곧 2008년 대규모 촛불시위를 통한 대중적 수준의 새로운 저항운동의 등장은 어느 날 갑자기 돌출한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내적 변화를 통해 예비되었고, 그 가운데 젠더민주주의 경향이 향후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을 규정하는 데 있어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주장한다. 한마디로 우

리가 인식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상관없이, 광우병 감염 위험이 의심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촛불시위는 국민 보건과 위생의 권리와 관련, 정치적 정당성과 민주주의를 규정하는 의제에 있어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은 전 지구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최근 신종인플루엔자의 급속한 확산이 보여주듯이, 다른 무엇보다 '질병의 세계화'가 각국의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부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먹거리 안전과 질병의 세계화에 맞서서 저항한 촛불시위 등 젠더민주주의의 전개 과정 및 이들의 잠재적 힘을 정치제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 한국정치의 대표성의 위기는 명약관화한 일로 여겨진다.

이 글에는 젠더라는 용어를 주로 사회관계론적 시각에서 규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물론 일종의 사회관계로서의 젠더가 촛불집회를 경유해서야 비로소 한국사회에 출현했다는 것은 아니며, 이전의 한국 민주화과정에서 젠더가 그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민주주의의 성격이다. 촛불집회 이전의 민주화 과정에서, 젠더관계는 독자적 형태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채, 타자의 시선, 곧 가부장주의나 국가 그리고 시장자본주의에 의해 규정된 민주주의를 자기의 그것과 동일시하였다. 아니 보다 정확히, 동일시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촛불집회를 젠더 사회관계가 주도적으로 규정함에 의해서 민주주의의 의미는 보다 풍부해지고 다성적 목소리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한에서 촛불집회는 세계사적 사건이다.

민주주의는 이제 더 이상 동일성에 의해 규정되며, 예정된 혹은 선형적 법칙성에 의존하는 식의, 예컨대 부르주아 계급이나 노동자 계급이라는 거대 주체의 서사로만 기록될 수는 없다. 사실 이러한 형태의 대문자 '그(He or The) 민주주의'는 본래의 민주주의 의미가 지니는 낮은 목소리들 사이의 마주침과 아우성, 그 반역적이고 전복적 특성에도 반한다. 민주주의는 가질 수도, 만질 수도 없이 저 하늘에 빛나기만 하는 성좌(星座)가 아니기에 계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삶과 생활에 밀착해 있어야 하며, 이런 한에서 더욱더 세속화 내지 사회화될 필요가 있다. 배워야만 알 수 있는 민주주의라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II. 사회양극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사회양극화 '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회양극화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회양극화 현상을 주어진, 곧 소여(所與)의 것으로 파악하여, 사회양극화가 드러내는 혹은 그것이 배태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결과에 주목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양극화란 이렇이러한 것이다 등등 사회양극화에 대한 주요 연구를 검토해본다면 이러한 주장이 그다지 틀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회양극화에 대한 논의는 일단 IMF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 점과 정부 주도로 연구가 진행된 점이 특징적이다. 몇 가지 대표적 연구를 검토해보기로 하자. 김문조(2008)는 사회양극화를 '사회적 자원의 이원적 편중이고착된 상황'으로 규정하는 가운데, 이러한 방식의 사회양극화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본격화한 것으로 파악한다. 최근 우리사회의 양극화 경향이 경제소득 차원은 물론 자산, 교육, 주거, 소비, 의식 등 다방면으로 파급되고 있다고 보며, 이러한 현상을 크게 경제적 양극화, 사회문화적 양극화, 의식적 양극화로 나누어 분석한다.

전병유 외(2007)는 양극화를 광의의 의미에서 일반적 불평등과 격차의 문제로 이해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개방시스템으로 전면 전환되면서 경제부문간, 경제주체 간 역량 차이가 더욱 뚜렷해졌으며 여러 차원에서 불평등 격차의 확대가 심화되고 있다고 간주한다. 사회양극화를 두 개의 극점 주변으로 군집화되어 하나의 사회가 두 개의 사회로 분리되어가는 현상을 지칭한다고 말한다.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과 격차 문제는 노동시장 내부의 문제(고용형태 즉, 비정규직 문제가 그 핵심)와 노동력 재생산 과정의 문제(교육, 인적자원투자의 격차를 낳는 사교육 문제가 핵심)로 나누어 분석한다.

강신욱 외(2006) 연구보고서는 사회양극화가 지닌 의미가 불분명한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불평등 심화, 상하 소득격차 확대, 빈곤 확대, 중산층 붕괴, 계층 간 이동가능성 축소 등으로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다고 본다. 최근 학계 연구들은 소득분배의 극화를 양극화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2004년 이후 문헌에서 양극화의 범위를 산업, 기업, 고용, 소득분배 등의 다

양한 영역에 확대하여 적용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사회양극화 현상을 지목하고 이를 다각, 심층적으로 분석하려 했다는 점에서 사회양극화 문제와 관련된 최근 연구들은 사회양극화 현상을 쟁점화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 대부분은 어찌서 사회양극화가 1990년대 말, 정확히 IMF 경제위기 이후부터 한층 심화되었는가에 대한 원인, 곧 인과적 설명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설명 있다고 해도 주로 순환논법이나 환원적 설명방식에 의거한다. 따라서 이러한 설명방식이 제시하는 양극화의 원인을 통해서는 사회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역시 국가의 정책적 지원, 가령 사회양극화 심화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노동빈곤층 내지 차상위(次上位) 계층에 대한 국가의 사회복지 확충으로 주로 귀결한다. 이는 사회양극화 그 자체를 해결하려 한다기보다 국가복지정책이라는 대중요법을 통해 사회양극화를 다소 완화하는 차원에 그치는 식의 일종의 진통제 역할을 할 뿐이다. 이러한 형태의 사회복지정책예산은 국가의 정책순위에 있어서도 성장과 발전의 불가피한 부산물로서의 사회양극화를 다소 완화하기 위한 정도의 잔여적(residual)이고 부차적 지위를 부여받을 것임은 주지의 일이다.

대부분의 사회양극화론은 1990년대 말 IMF 경제위기 이후부터 지난 10년간 사회양극화가 급속히 증대했다고 간주한다. 그런데 이 10년은 한국사회에서 비교적 민주적 정부라 할 수 있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에 해당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들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적 합의가 그다지 민주주의적이지 않았음을 반증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사회양극화론은 대체로 비정규직의 증가로 근로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은 왜 증대했는가? 사실 이쯤 되면 사회양극화론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일 터이다. 기존 사회양극화 연구가 주목하는 사회양극화의 원인은 비정규직 증대나 노동시장의 분절화 같은 요인 차원에서 정지한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경제학이 나서야 할 차례다. 주류경제학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경제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 다음,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은 분배요구를 자제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해야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은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구조는 우리 사회에 보편화되어 있으며,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적 성향의 독점언론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사회양극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주류적 해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이는 대단히 잘못된 접근법이며 현실의 내용을 완전히 오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에서 독점자본의 규모와 권력은 이전보다 훨씬 증대했다. 김대중 정권 중반부터 노무현 정권시기 내내 경제 여건은 여러 가지 지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치상으로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이를 반영하듯, 30대 기업으로 통칭되는 한국의 독점자본은 이 기간 동안 엄청난 규모의 자본축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현재 550개 상장회사의 사내유보금은 400조에 달하고, 이 가운데 10대 그룹은 자기 자본금의 8배가 넘는 사내유보를 지니고 있다(시사서울 09/02/23). 사내유보 형태의 자본스톡의 비약적 증가가 현재 금산분리완화와 자본시장통합 나아가 참여정부가 한미 FTA를 줄속으로 추진한 근본원인이라 하겠다. 한국의 독점자본은 사내유보를 원래 금융자본 겸업 추진을 위한 운용자금으로 용도변경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현재 경제위기로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한 채, 손에 꼭 움켜쥐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자기들 잉여자본은 투자도 하지 않고 곳간에 쫄쫄 쌓여놓은 채, 노동자들에게는 한 사람 임금을 두 사람 분으로 나누고 그것도 모자라 대졸 초임을 삭감하는 식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하라니, 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발상인가!

한마디로 사회양극화는 사회구성원들이 감내해야할 소여(所興)의 현상이 아니라 독점자본과 국가권력이 IMF 경제위기 이후 친시장적 기업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일련의 한국사회 재편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한 부산물이다. 사회양극화는 따라서 정치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 책임소재 및 인과구조가 대단히 뚜렷한 편이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자본독점의 심화현상을 통해 부의 극단적 편중이 발생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상대적 빈곤의 증대 형태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하는 과정이 바로 사회양극화로 현상하는 것이다. 이 경우,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재벌과 독점자본의 문제로 상징되는 부의 편중 문제만 해결된다면 사회양극화가 현저히 완화 내지 해결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생각만큼 그리 간단치 않다는 데 있다. 그것은 바로 다른 한쪽 극, 곧 대자본으로 상징되는 상위계층으로의 부의 집중과 증대는 비교적 명확한 편인데, 과연 다른 한쪽 극에서 빈곤과 불평등이 일상화되는 형태로 사회양극화가 가중되어 왔다고 단순하게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기존 사회양극화론이 놓

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여기서 다른 한쪽 극, 그 진실의 일단을 살펴보기로 하자.

사회양극화론의 일반적 전제는 상하층 소득 양극화 내지 하향적 소득 양극화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중산층 붕괴' 현상에 기초한다. 이른바 '다이아몬드' 꼴 사회에서 호리병 형태의 계층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는 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가? 물론 도식적으로야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지만, 이러한 도식이 놓치고 있는 지점은 그 내용 상의 변화를 전혀 감안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사회양극화론이 전제하는 그러한 불평등 증대의 도식은 과연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의 변화양상을 제대로 짚어낸 것일까?¹⁾

1990년대 말 이후 지난 10년간 서민들, 소위 개미들의 주식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코스닥, 코스피 지수는 연일 상승가를 치며 약간의 조정시기가 있긴 했었지만 그 최대치를 거듭 경신했다. 이에 더해 국민의 정부 중반기 이후부터 참여정부 시기 내내 부동산투자를 위한 가계대출 및 부동산 가격의 증가 폭과 그 상승속도는 아마도 세계신기록 감이라고 할 수 있다. 사교육비와 대표적 내구소비재인 통신비용 및 자동차 보유의 증가속도는 어떠한가? 이게 과연 '사회양극화'가 극대화된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주식과 부동산 투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았다. 또한 대학생들도 이 광풍에 동참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세대와 학력을 불문하며, 나아가 지역을 가리지

1) 김문조(2008)는 사회문화적 양극화를 주거지 양극화, 교육과 직업의 공간적 분절, 소비 양극화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중산층 생활양식의 변동과 중간계급 혹은 중산층 내부의 균열을 만들어내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사회학의 오랜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를 10개 층위로 나누어 이 중 핵심적 중산층, 주변적 중산층, 하층을 비교하고, 주관적인 계층소속감을 기준으로 중산층 진입 층(10년 전은 아니나 현재는 중산층), 유지층(10년 전도 지금도 중산층), 탈락 층(10년 전은 중산층)으로 나누어 사회경제적 지위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이때 탈락 층의 82.9%가 개인 월평균소득 2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탈락층을 포함한 세 층 모두 생활비 중 가장 증가한 항목은 사교육비라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주거비용과 사교육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면, 사회양극화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음을 반증한다. 한편 소비성향을 웰빙 지향성과 실용지향성으로 나누어 2000년 이후 중산층의 소비성향을 분석한 장미혜(2006)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취향 면에서 중산층 내부의 양극화 현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않는 범사회적, 범국민적 레저로서 지난 10년간 한국인들의 '존재의 이유'였다 해도 그리 지나치지 않다. 지난 5년간 한국인들을 사로잡은 말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사회정의도 아니고, 바로 '부동산'과 '펀드'였음에 대부분 동의할 줄로 안다.

적어도 지난 10년 동안 상당수 한국인들이 대박신화와 물신주의에 편승했다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당연히 '사회양극화(론)'에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고 관심을 둘 이유도 없었다. 모(某) 카드회사 광고 카피처럼 "여러분 부자되세요"나 "대박나세요"가 최대 덕담이자 신년인사로 오랫동안 각광을 받아 온 사실은 그러므로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근로소득, 곧 임금으로 생계를 주로 충당한다면 어떻게 부자가 되고 대박이 날 수 있겠냐는 말이다.²⁾ 부동산과 펀드 투자를 위한 가계차입이 이를 대신해 주었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주요 사회경제정책 역시 투기를 국민스포츠화하는 방향으로 거시경제정책을 펼쳐나갔다. 따라서 사회양극화 현상과 사회양극화론은 실제로는 일부 언론과 학계의 관심사였을 뿐이다. 그 주요내용 또한 국가와 독점자본이 결탁하여 진행해온 신자유주의적 친시장기업국가로의 이행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라기보다 그러한 전환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병리현상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의 수준에 머물렀다고 해야 할 것이다.³⁾

참여정부가 집권 말기에 추진한 한미 FTA 체결 움직임 역시 동일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닌다. 다시 말해서, 기왕에 강력한 추세로 자리 잡은 금융자본서비스 산

2) 2001년 이후 양극화 추이를 보면 근로소득의 양극화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가구총소득의 양극화는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지니계수는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양극화 지수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데, 이러한 양극화의 급진전은 주로 주식이나 이자소득 등 비근로소득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력 재생산비의 양극화를 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액이 커지며, 소득 5분위별로 사교육비 지출상의 격차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더욱 확대되었다(전병유 외 2007).

3) 보수언론들의 사회양극화 관련 보도태도를 본다면, 그것의 심층적 원인에 주목하기보다는 표피적 현상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 어려운데 취직 가져. 조혼·만혼 양극화" (머니투데이 08/07/27), "1분기 제조업 양극화 심화" (아시아경제 08/07/27), "정크푸드로 웰빙하라?—건강의 양극화문제" (신동아 08/07/25), "벌어도 벌어도 적자... 몰락하는 40~50대" (아시아경제 08/07/25), "'양극화 버팀목' 중산층 또 무너진다" (중앙일보 08/07/25).

업 중심으로 한국의 사회경제적 축적구조를 재편하고 이를 지속하기 위해 미국 월가의 금융자본 비법을 적극 동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가령 미국산 값싼 농산물이나 쇠고기 등을 대량 수입하여 서민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들로 하여금 임금상승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고용유연화 등 구조조정을 보다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어찌서 참여정부 시절에 비정규직 법안과 한미 FTA 체결이 동시에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다소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참여정부가 이 두 가지 정책 패키지를 사회양극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주요 사회경제 정책수단으로 염두에 두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인다(유시민 2009).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한국인 다수를 가치법칙이라는 자본주의 공리계에 실질적으로 포섭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MB 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제대통령과 뉴타운' 공약이 그 대표적 사례다. 그러므로 기존의 사회양극화론은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일반 추세를 설명하는 데 있어 한계를 드러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2009년 지금 여기 한국사회에서 사회양극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다시 말해서 우리 및 우리 사회의 자화상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정직하게 되물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올바르게 답한다면, 기존의 사회양극화론이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소득양극화에 의한 사회변동양상은 1960~70년대 개발시대에 그런대로 잘 들어맞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개발이익에 편승하지 못하고 주변화된 사회적 약자 및 도시빈민 등 하층계급의 증가현상에 착목했을 때, '사회양극화론'은 가장 적실한 설명력을 지닌다고 하겠다. 이것이 바로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개발독재를 관통한 사회양극화 현상을 통렬히 고발한 사회참여 문학작품으로 지금껏 자리매김 되고 있는 대표적 이유기도 하다. 이 소설에서 1970년대식 사회양극화의 알레고리로 차용되고 있는 쇠고기 관련 에피소드를 들여다보기로 하자.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고는 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 하면서 말했다.

“고기 굽는 냄새란다. 우리도 나중에 해먹자.”

“나중에 언제?”

“자, 빨리 가자.”

어머니는 말했다.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단다.”

“거짓말”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면서 내가 말했다.

.....

영희는 부엌문 앞에 서서 말했다.

“엄마 몰래 또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대. 나는 안 갔어.”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영희를 흘겨보았다. 영희는 또 말했다.

“엄마, 큰 오빠가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다고 말했더니 때리려고 그래.”

영희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조세희 2000, 85-86).

문자 그대로의 사회양극화란 바로 이런 것이다. 쇠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으로의 양극화. 이러한 사회양극화의 알레고리가 과연 지난 10년간의 한국사회의 변화양상을 드러내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가? 누가 이러한 알레고리에 동의할 것인가? 1990년대 말 이후, 한국 문학계의 동향을 사례로 들어 보자. 문학은 그 사회의 평균의식을 드러내는 바로미터이며 그 가운데 대중적으로 읽히는 통속세대소설이 가장 그렇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말 이후 사회양극화 현상에 진지하게 제대로 천착한 소설이 있는가? 이 시기 한국 문학계는 한마디로 사회참여소설의 실종으로 규정할 수 있다. 중산층의 애정편력과 자의식의 전개라는 독백적 수사학에 기반한 사소설이 주류 내지 대세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는 문학이 변절했다기보다 사회가 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기존의 사회양극화론이 과연 한국사회의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년간의 추세를 통해 2009년 한국사회에 사회양극화론을 적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상하소득 양극화에 기반한 사회경제적 양극화현상이 아닌 가치법칙이라는 자본주의적 공리계에 포섭된 계급, 계층과 이러한 공리계에서 배제되고 주변

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포섭되지 않은 채 저항하려는 계급, 계층 사이의 양극화가 보다 더 적실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⁴⁾

III.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사회양극화

2007년 12월은 한국현대사에서 대단히 기묘한 날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BBK 사건 등 온갖 비리의혹을 뒤로 하고 건설사 사장 출신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정치경력이라곤 선거법 위반으로 임기 중간에 의원직을 상실한 초선에다가, 한 일이라곤 청계천 복원과 뉴타운 사업 등 재건축 전문 서울시장이었던 MB가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을까? 필자는 17대 대통령 선거 과정과 MB의 대통령 당선소식을 접하면서 마르크스의 『루이 보나파르트와 브뤼메르 18일』을 떠올렸다. 잘 알려진 대로 당대 최고의 협잡꾼이자 룬펜프롤레타리아트 두목 출신인 루이 보나파르트를 프랑스 대통령에 올려놓게 한 가장 주요한 원인은 삼촌인 나폴레옹 1세의 후광과 나폴레옹의 농지개혁 덕에 자경지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충성을 보였던 소자영농들의 절대적 지지 덕분이었다. 이와 유사하게 MB라는 기묘한 인물을 대통령에 당선시킨 일등공신이야말로 개발시대의 망령이

-
- 4) 이러한 방식으로 정의된 계급, 계층이 프롤레타리아트의 현대적 어법에 가장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쏘변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편이다. 쏘변(Thoburn 2002)에 따르면, 마르크스가 제시한 프롤레타리아트의 본질은 현존하는 세계 질서의 자기폐지적 극복에 있다.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트는 규정된 주체성 없이 혹은 그러한 실제적 주체성에 대립하여 소수적 차이와 창조성의 과정들을 호출하는 구성양식을 서술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사회적 환경을 적대적인 것으로, 다시 말해서 자신을 구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두는 그 무엇으로 경험한다. 그래서 어떤 독창적이고 그/그녀만의 자율적 관심을 표현하는 일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이 사회적 관계들과 깊숙이 그리고 부단히 교전하지 않을 수 없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이러한 관계들을 불안정하게 하면서, 또 그 관계들을 새로운 무엇으로 열어젖히려 하면서 그 자신을 구성하는 것은 바로 이 교전을 통해서 그리고 그 교전에서 발생하는 개념적 실천적 발명을 통해서이다. 동일성 및 이항대립과 비교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급진적 힘이 유지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이름 붙여지지 않거나 혹은 자율적인 정치적 주체로 획정되고 가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의 등 뒤에서 이제는 고인이 된 정주영 전 현대회장과 개발시대 전사들의 고도성장의 노스텔지어가 아른거리고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MB 정부는 이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재임기간을 무익한 이념논쟁으로 허송세월한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했다. 나아가 이러한 이념논쟁에서 벗어나려는 듯 자신을 경제대통령으로, 정권의 지향점을 실용주의라고 명명했다.⁵⁾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는 무엇보다 시대착오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미국 발 세계경제위기가 본격화된 시점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해야겠다. 금융위기가 발발하자마자 가장 먼저 파산한 미국 4대 투자은행 가운데 하나였던 리먼브러더스에 빚대 한국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리(李)만(萬)브러더스'로 명명한 것은 MB식 실용주의 노선에 대한 더할 나위 없는 정확한 표현이자, 한마디로 절창(絶唱)이 아닐 수 없다.

현 정권의 실용주의 노선을 축약한다면 대통령 스스로 표현했듯이,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사회경제노선의 한국화에 따른 사실상 한국민주주의의 위기, 더 나아가 해체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사회양극화를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87년 민주화 이후 일정 정도 사회국가적 외피를 둘러 왔던 한국의 국가형태 역시 신자유주의적 기업국가 내지 경찰국가로의 폭력적 전환이 불가피한 일로 여겨진다(김세균 2008).

실용주의라는 명분 하에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노선의 한국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민주주의 정부 10년의 결과, 특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사회경제노선의 공통된 특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간 민주정부의 사회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은 이명박 정부의 그것과 상당 정도 유사성을 보이며, 실제로 현 정권의 실용주의 노선이 본격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사회를 형성하게 한 역사적, 정치적 계기는 무엇보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는 '87년 체제'를 낳게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적 심화를 위해서 '87년 체제'는 정치적 민주주의에 이은 사회경제적 민주화 달성이라는 책무를 부과했는데, 그것

5)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의 사회사상적 기원에 대해서는 최형익(2009) 참조.

은 무엇보다 당시 상대적으로 강력했던 민중부문의 정치적 진출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다. 실제로도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정치 정당성의 일근근거가 87년 헌법에 담겨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역사는 반대로 전개되었다. 역설적이게도 정치적 정당성의 한계를 가장 크게 노정한 노태우 정권이 오히려 출범초기 택시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제·개발부담금제 등 3개 법안을 그 핵심으로 하는 토지공개념 도입, 노동법의 전향적 개정 등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정책을 반짝 단행했다. 하지만 이도 잠깐, 3당 합당 이후 한국민주주의의 심화발전을 위한 정치노선은 완전히 실종되기에 이른다.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OECD 전격 가입으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노선에 입각한 금융자유화 정책은 한국경제를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만들어 놓았고 이는 1998년 경제외환위기를 촉발하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 역시 외환경제위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국 및 월스트리트, 곧 전 세계 초국적 금융독점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IMF의 '극약처방' (bitter pills)을 아무런 유보 조건조차 없이 그대로 수용했다. 오죽하면 이후 IMF 내부나 미국 경제학계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IMF 처방전은 유례없이 가혹한 것이었고 한국사회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으니 말이다. 이 과정에서 1980년대 이후 지속돼온 반독재민주주의연합의 분열적 해체가 발생했다. 이 시기 동안 시민운동의 급작스러운 발전 역시 한국민주주의의 형제화에 일조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시민운동은 낙천낙선캠페인,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 중심의 민주주의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정치형식주의를 노정했다. 사회경제민주화 역시 있다고 해도 소액주주운동 등 주로 소유지배구조의 변경에 집중하는 식의 재벌개혁 등 주로 한국사회의 급속한 자유주의적 합리화에 그 초점이 맞춰졌을 뿐이다. 이로부터 한국민주화 과정 속에서 진정 담겨졌어야 했을 사회경제적 정의 실현을 바탕으로 한 민중성이 거세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6대 대선을 통한 노무현 정권의 등장은 다시 한 번 한국민주주의의 지체된 사회경제민주화 요구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마지막 계기로 기층 민중들의 간절한 소망을 반영한 선거결과였다. 하지만 행정, 의회 양대 권력 모두를 명실상부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절대적 지지를 등에 업고서도 참여정부는 사회경제적 개혁이라는 한국민주화를 위해 지체되어온 시대적 과제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대통령 스스로 '시장으로 권력이 넘어갔다'고 체념 섞인 말투로 나지막이

옹조리면서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했다. 이후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시도 및 한미 FTA 체결, 비정규직법안 통과, 이라크 파병, 참여정부 5년간 유례없는 부동산 가격 폭등, 미국에 대한 군사외교종속의 사실상 심화 등 한국민주주의의 진전과는 거리가 먼 일들이 발생했다. 일반 민중들은 기존 민주화 세력과 기득권적 보수상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나라당을 위시한 권위주의적 개발연합 간에 별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현실에 한편으로는 경악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복지향상을 기존 민주화에 의한 평등주의 노선에 입각하기보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 기초한 시장에서의 개별 이익향상에 몰두했다.

주식, 부동산 투기의 급속한 확산, 뉴타운, 대운하 등 개발이익에 편승해 들어가고자 하는 식의 '대박신화'에 대중들이 몰입해 들어가는 과정에 더해 '국민성공시대'라는 당시 이명박 후보의 대선구호는 대중적 욕망 실현의 꿈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집권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효과를 거두었다. 저간의 사정이 이렇다면 야 이명박 정권이 주권 국가의 협상 행위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미국과의 쇄고기협상을 국민의 의사를 묻는 일은 고사하고 국회와의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양심의 거리낌조차 없이, 졸속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다. 2008년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미국산 쇄고기수입 재개 협상파동은 한편의 돌발영상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의 심화 지체에 따른 민주주의의 그 자체의 형해화(形骸化), 여야 간 별반 차이를 둘 수 없는 정당정치 구조, 탐욕과 대박신화가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 개별 국민이 이명박 후보를 욕망의 탈출구로 선택한 필연적 결과였다.

IV. 사회양극화에 저항하기: 촛불집회를 통한 젠더민주주의의 출현

1990년대 이후 소설문학의 주류로 등장한 신경숙, 은희경, 김형경 류의 사소설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일정한 긍정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에서 거의 최초로 개인주의적 젠더의식의 성장을 그 배경으로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젠더 자의식의 성장이 자기만족적 형태의 사

적 개인의 폐쇄회로에 갇혀버리느냐, 아니면 집단적 주체화 양식과 결합하여 새로운 민주적 대중, 곧 데모스의 형태로 거듭날 수 있는가 여부에 그 사회의 민주주의의 미래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나로 통칭되는 자아의 개성 표출에 대한 억압구조가 내면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민족국가라는 정치종교에 포섭되었으며, 그동안 민주화에 기여한 사회운동세력 또한 집단의 목표에 비해서 구성원들의 개성 내지 욕망을 하위적인 것으로 배치하고 이를 '운동의 대의'라는 미명하에 희생을 정당화해왔다. 최근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행 시도와 이를 은폐하려 했던 사건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결국 '나'의 발견이라는 개인주의적 성찰을 거치지 않는 한, 새로운 데모스의 출현은 요원한 일로 여겨졌다.

나의 발견을 경유하면서 동시에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나름대로 성공한 거의 유일한 사회 주체가 바로 '젠더'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나를 경유한 사회 주체로의 등장을 예비하고 있던 젠더가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촛불집회의 주역으로서 집단지성의 형태로 나타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무엇보다 바로 광우병 쇠고기 이슈 자체가 그동안 민주화과정에서 찾아 볼 수 없었던 사적이면서 동시에 너무나도 공적인, 다시 말해서 나의 문제이면서 너의 문제이며 동시에 우리의 문제가 결합한 생활민주주의의 그 자체의 이슈였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2008년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왜 젠더가 그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었는가라는 수수께끼에 대한 답의 일단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사회양극화에 저항하며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젠더민주주의와 젠더의 특징을 어떤 식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젠더민주주의로서의 촛불집회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로 집단지성의 출현을 들 수 있다. 젠더자유주의와 젠더민주주의를 가름하는 주요한 차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동안 한국사회의 젠더이슈는 주로 자유주의적 젠더에 의해 규정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젠더이슈가 주로 변호사, 교수, 사회단체활동가 등 여성문제 전문가 중심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개정운동이나 여권신장을 위한 국가청원운동에 주로 의존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젠더자유주의가 제시한 현안들은 호주제폐지 등 대부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주요 젠더정책에 의해 포괄되었으며, 여성가족부 등의 설립으로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 부서마저 이명박 정부 들어 보건복지부에 통폐합되었지만, 사실상 폐지라 할 수 있는 이

러한 조치에 대한 정치적 항의가 적극적으로 조직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한국사회에 미친 젠더자유주의의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대중적 토대의 허약성을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젠더이슈의 급진화는 그것이 생활민주주의와 연관된 집단적 어젠다로 등장할 때만 주요한 정치사회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촛불집회를 통해 새롭게 등장한 민주적 젠더그룹은 전문가집단을 그 다지 필요로 하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대중이면서 동시에 나름의 지성을 갖춘 집단지성의 양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집단지성의 젠더적 특징을 다소 비틀어 표현한 것이 촛불집회 때 한참 유행한 '배운 여자'라는 신조어다.⁶⁾ 이러한 민주적 대중으로서의 젠더가 소통하는 장소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가로지르는 '커뮤니티' 공간이었다.⁷⁾

그렇다면 이 글은 젠더 개념을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는가? 젠더는 여성/여성성을 그 주요한 사회 주체로 설정하고 있긴 하지만, 어떤 불변적 본질을 전제하는 실체적 개념, 다시 말해서 젠더=생물학적 여성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종의 사회관계로 젠더를 규정하는 편이 보다 적절할 듯한데, 젠더의 등장은 성 분할에 기초한 사회적 노동분업과 가부장제를 그 배경으로 하지만, 모든 성 분할적 노동분업이 그 자체로 젠더 사회관계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젠더는 성 분할에 기초한 사회적 분업관계가 정치사회적 의제로 이슈화될 때, 전면에 등장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관계적 특성에 따라 젠더자유주의와 젠더민주주의로

- 6) 인터넷에 떠다니는 출처 불명의 정의에 의하자면 '배운 여자'는 단순히 많이 배웠다는 고학력을 뜻하는 1차원적 개념이 아니라 배운 지식을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르게 활용하는 20~40대 여성들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신조어다. 이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원래 인터넷 여성패션동호회였던 '소울드레서'와 같은 여성회원 위주의 커뮤니티들이 "너는 배운 여자인가"와 같은 문구를 쓴 플래카드를 들고 촛불집회에 참여하면서 급속히 전파되었다.
- 7) 1990년 중반 이후 생활협동조합, 공동육아 및 환경친화적 대안학교 등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젠더커뮤니티가 활성화된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여기에 대해 2008년 촛불집회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젠더 집단이 바로 인터넷에서 활발히 소통하고 있던 인터넷 여성동호회들이었다. 대표적으로 '소울드레서', '82COOK', '마이클럽', '화장발', '고무신' 등을 들 수 있는데, 대부분 그 회원수가 수만여 명에 달한다. 특히 '82COOK'과 같은 커뮤니티는 그 회원수가 12만 5천 명에 육박하며, 촛불시위 기간을 통해 약 1만 5천 명의 회원이 증가했다고 한다(목수정 2008, 151).

크게 일별해 볼 수 있다(Mouffe 2007). 이때, 다소 거칠게 분류하자면 젠더자유주의는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에 그리고 젠더민주주의는 실질적 혹은 생활민주주의의 개념에 대체로 조응한다.

촛불집회를 급진적 젠더민주주의 기획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이러한 입장은 급진민주주의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젠더민주주의를 조망한 샤텔 무페(Mouffe 2007, 121)의 생각과 일정정도 공명하는 바가 있다. 하지만 그 유사성보다는 젠더민주주의를 정의하는 정치적 관점의 차이가 보다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무페는 본질주의 비판에 너무 관심을 둔 나머지, 젠더나 계급, 또는 인종이 기반하고 있는 객관적 사회관계가 마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시각해버린다. 무페에 따르면, 여성주의자들은 젠더와 연관되는 사회관계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회관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속의 형식들에 대해 투쟁하려는 정치적 기획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계급이나 인종이나 젠더와 같은 하나의 단일한 위치로 환원하기보다는 주체가 서로 다른 담론들과 주체위치들을 통해 구성하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2007, 143).

젠더민주주의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여성정치학에 과도하게 기댈 경우, 자칫 본질주의로 이탈하여 여타의 다른 민주주의 기획들과의 연대를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무페(2007, 142)의 지적은 분명 경청할 가치가 있다.⁸⁾ 하지만 급진민주주의적 기획을 만들어가는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을 일시적 담론의 산물로 간주하는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입장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계급이 단지 담론의 산물이 아니듯이, 성 정체성 또한 마찬가지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구성되고 형성되어온 사회적 경험구조의 산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여성성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하지 않고는 젠더민주주의 역시 구성될 수 없는 개념임을 인정한다. 다만 이 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성이 반드시 혹은 필연

8) 무페는 본질주의에 기댄 여성주의 정치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곧 미리 주어진 '여성성'의 통일이 어떤 선험적 귀속의 기초 위에 존재하거나, 이것이 부인되면 통일의 형식들과 여성주의 정치학이 존재할 수 없다는 식이다. 같은 이유에서 여성으로서의 여성의 정체성을 본질주의적 관념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성 정체성에 대한 참조나 언급 없이도 과연 여성주의 정치학이 구축될 수 있을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여성주의 정치학의 대표적 논의로는 메리 디에츠(Dietz 1985), 캐롤 페이트먼(Pateman 1988), 아이리스 영(Young 1989) 참조.

적으로 젠더민주주의로 귀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젠더민주주의는 다소 우연히 여겨질 수도 있는 사회경제 조건의 결합양상에 따라 등장하거나 사라질 수도 있는 정치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특정 형태로서의 젠더민주주의가 등장하는 사회,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와 탐구가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08년 촛불집회를 통해 그 외관상 정치와는 다소 무관해 보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사회운동이나 여성운동 하는 여성으로 표상하거나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가정주부 등 평범한 여성들이 전면에 등장한 것에 대해 언론이나 사회과학자들이 그 원인분석은 포기한 채 피상적 스케치에 머문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다. 가령, 2008년 7월 9일자 <경향신문>은 촛불집회를 여성들이 주도하는 일반 경향과 그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잘 정리하고 있지만, 어쨌서 하필 지금 시기에 그것도 광우병을 매개로 터져 나왔는가에 대한 심층분석은 생략되어 있는 인상이다.

촛불집회는 사실상 여성들이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촛불 참여자의 70%는 여성이 차지했다. 5월 2일 처음 촛불을 든 어린 여학생들은 '촛불소녀' 마스코트로 형상화됐다. 미국산 쇠고기 거부 플래카드는 과친의 주부들이 만들었고 평화 시위는 유모차 부대가 이끌었다. 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을 벌이고 있는 82cook과 소울드레서·쌍코 등 여성 인터넷 모임, 미주 한인 주부들, iCOOP생협 등은 고비마다 촛불의 주체로 나섰다. 1987년 6월 항쟁의 불길을 '넥타이 부대'가 키웠듯이 촛불집회는 '아마조네스(그리스 신화 속의 여전사) 부대'가 이끌었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젠더 혹은 젠더 사회관계가 촛불집회라는 급진적 방식을 따라 사회양극화에 저항하는 민주주의의 주체로 전면 등장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일차적으로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과 시장관계의 전면화라는 신자유주의적 사회경제정책이 일면 배척하는 관계에 있다가 상호결합하여 모순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결절지점에 젠더 사회관계가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젠더 사회관계의 출현은 지난 한 세대 간에 걸친 한국사회변동의 산물이다. 사실상 한국에서 1960~70년대 고도성장은 공·사 영역의 분리 내지 가사노동과 임금노동의 성 분할적 노동분업에 기반한 정규직 남성노동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고도성장과정에서 여성들의 희생이 강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고도성장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아이들은 달랐다.

촛불집회를 통해 드러났듯이, 현재 한국사회의 실질적 민주화 과정에 새로운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젠더는 1960년대 이후 출생한 여성들로 그 대부분이 사회적 교육체계와 직업을 선택하는 사회경제적 영역에서만큼은 그 이전 세대와 달리,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성차별을 받지 않는 최초의 세대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최초의 동시적 수혜자였다. 하지만 이들을 가로막은 것은 바로 실질적 차별, 곧 법 형식적으로는 표출되지 않는 내밀하고도 은밀하게 작동하는 억압기제였다.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동일한 교육을 받고 능력에 있어서는 오히려 앞설지 모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억압상황으로 인해서 여성들은 공사분리체계에 기초한 가사노동영역으로의 귀환을 강요받았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형식적 민주화 과정에 일정한 기대를 건 것도 사실이지만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기초한 한국사회는 그다지 달라진 것이 없었으며, IMF 경제위기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촉진시켰다.

따라서 여성들에게 분열증적 상황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었다. 바로 이러한 분열증적 상황이 여성들로 하여금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계기로 작용했고, 동시에 1990년대 여성주의 성향의 사소설 붐을 일으키게 한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이때 잠정적 사회협약이 등장했으니, 여성들이 선택한 지점이 바로 소비주권으로 요약되는 가정경제의 장악이었다. 가계 혹은 가정경제로 상징되는 생활세계에서의 영향력 확대가 젠더사회관계를 급속히 출현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후 젠더사회관계는 임노동관계를 제외한 전 사회적 영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한국의 사회경제적 관계망 가운데 젠더사회관계와 접촉되지 않는 지점을 찾아보기란 더 이상 어려운 노릇이다.

생활세계와 가정경제에서 젠더 관계가 우세한 지위로 등장했다는 말은 젠더 시선으로 자본주의적 공리계를 들여다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부터 젠더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이에 불화는 불가피한 일로 여겨졌다. 신자유주의는 한마디로 모든 사회영역에 금전적 손익계산에 기반한 공리적 사회관계를 수립하는 시장근본주의적 프로젝트인 반면에 젠더사회관계는 사용가치에 기반한 생활

중심의 경제를 기반으로 한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자본주의적 공리계의 관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문제는 저렴한 비용으로 효용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에 맞추어졌다. 따라서 광우병과 같은 식품 안전성 문제 역시 일반 공산품과 동일한 논리에 따라 맞춰질 것임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노릇이다. 다시 말해서, 광우병 발생 위험과 같은 식품 안전성 문제는 공산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량품과 유사할 뿐더러, 광우병 발생 확률이 낮고 더구나 그 안전성을 국제수역사무국과 같은 유수의 전문가집단에서 보증했음에도 불구하고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것은 반정부적 정치활동을 위한 명분으로 쇠고기 수입문제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게 한국 정부와 주류언론의 공식 입장이었다.

젠더 관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와는 정반대다. 일단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설령 가격이 저렴하여 가계 상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 해도 이는 결국 비정규직 증대와 정규직의 임금인하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생명안전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사회적 삶의 안정성에 치명적 손상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점 또한 명백한 일이다. 더구나 가격경쟁력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의 무제한 국내유입은 한국 축산농가를 붕괴시키고 식량주권을 심대히 위협함으로써 국내 시장을 미국 축산업자들의 독점 아래 놓이게 할 것이며, 같은 이유에서 장기적으로는 가격 면에서도 결코 저렴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리라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한마디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국민들의 생명건강을 위협하고 나아가 가정경제에 치명적 위협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고 해야 할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가 시작한지 한 달이 채 못돼서 출범 100일도 안되는 신생정권의 안위를 우려할 정도로 위기를 초래한 배경은 일차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국민생명과 보전에 직결되는 식품안전성 문제에 대한 공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안이하게 대응한 데 따른 것이었다. 한마디로 실정(失政)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정책적 실패만으로 정권이 곤장 위기에 처한다면 이 세상에 남아날 정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무능한 정권은 지구상에 널려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째서 2008년 봄 한국에서만, 그것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과거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이슈를 놓고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었는가 하는 것이며, 특히 그러한 사건을 촉발한 뇌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바로 여기에는 젠더 사회관계의 민주주의적 급진화가 그 배경이 되어 촛불 집회와 같은 대중적 항거 사태로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젠더민주주의의 등장으로 요약되는 촛불집회는 자본주의적 공리계의 필연적 산물인 사회양극화에 저항하는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이제 그 어떤 정권이건 신자유주의적 사회경제노선을 추진하는 한 젠더민주주의와 대립할 수밖에 없다. 촛불을 경유한 젠더민주주의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정치세력의 모습을 띠 수밖에 없으며 이럴 경우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의 변화는 물론 향후 새롭게 탄생할 신생정권들의 성격에도 지속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⁹⁾ 이렇게 본다면, 촛불집회를 통해 젠더민주주의의 탄생을 상징적으로 알린 '유모차 부대'에 대해 검경 등 공안당국이 아동학대법이라는 터무니없는 죄를 적용하여 집요하게 탄압하려 했던 사실 또한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다.

9) 이러한 견지에서 촛불집회 당시 '여성의 정권'이라는 ID를 가진 회원이 '82COOK'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시사해주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아는 것이 힘이지만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 1인 1단체 가입하기를 실행합시다. 교육운동이든 환경운동이든 소비자운동이든 여성운동이든 언론운동이든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나름대로 필요 꽃히는 NGO에 참여해 사람들도 사귀고 의식도 고양하고 전문성도 높이며 건강한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합시다. 그러다 자신감과 사명감이 생기면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장에 출마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 그렇게 여성들의 힘을 키워나가면서 우리 사회에 '여자의 색'을 입히며 세상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으로 바꿔나갑니다. 이번 촛불집회가 여성들의 '다른 문화'로 새로운 차원을 보여준 것처럼요. [...] 남성들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세상을 위계적 질서로 보고 적군과 아군으로 나눠 실질적인 내용보다 승부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폭력적 대결양상을 보이기 쉽고 잘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여성들이 끼어들어 '전체 틀을 바꿔낼 수 있을 것이다.'" www.82COOK.com(검색일: 2008. 6. 24).

V. 결론

쇠고기는 과거 부의 대명사였다. 하지만 이제는 광우병이라는 대재앙의 씨앗이 되고 있다. 작년 촛불집회에 한번이라도 나가보았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었지만, 여학생들 및 아이들과 함께 나온 주부 등 여성들이 참가자의 대부분이었다. 요컨대 촛불을 통해 탐욕과 물신의 지배에 맞서 돌봄과 살림, 보살핌의 정치적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문제는 한국사회에 스펅크스처럼 불쑥 솟아오른 젠더민주주의로서의 촛불집회를 그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추세로 미루어 본다면, 젠더 사회관계의 급속한 정치화는 불가피한 일로 여겨지며, 이는 향후 보수일변도의 한국정치의 협소한 대표체계를 위협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대표체계의 전반적 보수화와 촛불시위로 상징되는 젠더민주주의의 급진화 사이에 일종의 왜곡(distortion)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현재 경제위기와 사회양극화에 대한 처방에 있어서도 정치영역과 주류 시민사회의 보수성은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원조 국가인 미국과 비교해보았을 때조차 MB 정권의 사회경제정책상의 보수성은 너무나 뚜렷하며, 이는 한마디로 촛불집회를 통해서 배운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2008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정권의 등장은 세 가지 사회주체, 곧 노동자, 흑인, 여성, 다른 말로 표현해서 계급(class), 인종(race), 여성(gender)이 결합하여 이룬 정치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실질 득표력에 있어 젠더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이유의 전부는 아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적어도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위기 한가운데로 끌려 들어가는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오바마 정권의 등장은 또한 가능했다. 대량실업사태가 속출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중산층이 붕괴하면서 미국판 사회양극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기존 사회양극화론이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를 강타한 급속한 사회양극화 현상과 그것이 배태한 위험성을 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데 공헌했음을 인정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회양극화론이 그러한 현상을 발생시킨 사회경제적 인과 고리를 해명하지 못했다는 점, 무엇보다 개발독재 시대에 전형적인 사회경제적 빈곤현상에만 주로 주목함으로써 지난 10년간 진행된 대중

적 실물 사회경제의식과 괴리되었다는 사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사회학적 사회양극화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경제적 빈곤의 말단에 여성들을 위치 지음으로써 가정과 사회 양 영역에서 그녀들이 최종적 피해자라는 사실을 강조했지만 동시에 사회양극화에 저항하는 정치적 기제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는 일종의 완충역할을 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들을 일종의 사회양극화의 피해자로만 이해할 경우,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둘러싸고 전개된 일종의 정치현상, 곧 여성들의 광범위한 정치적 진출로 촉발된 촛불집회 및 대규모 시위 현상에 대한 정치적 의미에 대해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없다. 촛불집회에서 여성들의 활발했던 정치적 움직임은 젠더민주주의라고 명명할 수 있을 정도로 집단지성의 형식을 띠면서 정치적으로 각성한 새로운 형태의 민주적 대중, 곧 데모스의 출현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글은 기존 사회양극화론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사회경제적 빈곤의 견지에서가 아니라 1987년 이후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자아정체성 획득을 통해 새로운 정치주체로 성장하는 하나의 흐름으로서 젠더민주주의 현상에 주목하고자 했다.

촛불집회를 통해 무대 전면에 등장한 사회민주화의 한 흐름으로서 젠더민주주의가 이제 한국정치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한국정치의 주요 의제 및 이슈를 풍부히 하고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국민건강 및 보건안전 등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식품 안전과 자녀교육문제 등 미시적이고 생활에 밀착된 이슈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가열될 것이며, 이러한 의제를 전면화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제도정치에서도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갈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미시적 민주주의 요구가 비정규직 문제 등 거시적 사회경제적 민주화 의제로 그 전망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부는 다종다양한 민주주의 세력 간의 수평적 연대에 기반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여기서 '수평적'이라는 말이 중요하다.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이제 더 이상 한국 민주화는 어떤 특정계급이나 정치세력이 지도를 자처한다거나 어떤 도덕적 우월성을 선협적으로 주장하기에는 다변화되었고 집단지성이 그 대세로 형성했기 때문에 '계몽에 의한 민주주의'는 설 땅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촛불집회를 통한 젠더민주주의의 출현과정이 지난 10년간의 사회양극화의 또 다른 결과로 실용

주의라는 외피를 두르고 등장한 이명박 정권의 시장급진주의에 대한 비판과 성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젠더민주주의가 그 자체로 사회경제적 민주화라고는 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상당한 친화성을 띠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젠더민주주의의 견지에서 보았을 때조차 한국사회의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정책 상의 전환은 불가피하다. 이 가운데 미국과 같이 대규모 부실은행 등 금융자본에 대한 국유화 조치는 아주 기본적인 정책에 해당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계생활경제에 치명적 악영향을 초래하는 임금삭감이나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서는 적극 비판하고 저항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400조 원 달하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생산적 투자를 통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위기가 빈곤과 사회양극화로 전이되는 기제의 말단에 젠더 내지 젠더 사회관계가 자리 잡고 있고, 경제불황이 지속되고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젠더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권리는 없고 오직 의무만 있는' 식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젠더민주주의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자본주의적 공리계에 가장 대척점에 서 있을 뿐 아니라, 촛불집회에서 잘 보여주었듯이 사회양극화에 저항하는 가장 능동적 주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젠더민주주의와 MB 정권과 같이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띠는 정권 사이에 불화와 대립은 다반사의 일로 여겨지며, 2008년의 촛불시위는 그 예고편에 해당한다.

투고일 2008년 4월 28일

심사일 2009년 5월 11일

게재확정일 2009년 6월 5일

참고문헌

- 강신욱 외, 2006.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권지희, 2008. "여성, 새로운 정치주체로 떠오른다." 권지희 외, 『촛불이 민주주의다』, 해피스토리.
 김문조, 2008. 『한국사회의 양극화: '97년 외환위기와 사회불평등』, 집문당.
 김세균, 2008. "신자유주의 국가의 문제점."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주최 전국

-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21세기 한국정치의 발전방향』. 서울, 8월 12일.
- 목수정. 2008. “촛불소녀와 배운 여자, 문화적 상상력을 운동에 풀어놓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메이데이.
- 민가영. 2008. “신자유주의 시대 신빈곤층 십대 여성의 주체에 관한 연구: 젠더, 계급의 상호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박사논문.
- 유시민. 2009. 『후불제 민주주의』. 돌베개.
- 장미혜. 2006. “중산층의 양극화와 생활양식의 변화.” 한국사회학회 〈중산층 역할과 사회발전〉 제3차 포럼.
- 전병유 외. 2007. 『노동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조사회. 2000.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서울: 이성과 힘.
- 참여연대·참여사회연구소 〈한겨레〉 사진부. 2008. 『어둠은 촛불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겨레출판.
- 최형익. 2009. 『실질적 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 이론과 정치변동』. 한신대학교 출판부.
- 하승창. 2008. “2008 촛불과 사회운동의 과제.” 『촛불집회와 한국사회: 과제와 전망』. 한국정치사회학회 특별 심포지엄.
- 황정임. 2005. “양극화시대의 여성빈곤대응전략.” 『여성정책포럼』 제11호.
“여성이 밝힌 촛불 … 먹거리는 삶과 직결.” 2008. 『한겨레』(6월 12일).
- “고비마다 촛불 이끈 ‘아마조네스 부대’.” 2008. 『경향신문』(7월 9일).
- “‘촛불시민’ 대변할 정치세력이 없었다: 촛불, 100일을 말한다.” 2008. 『한겨레』(8월 14일).
- Dietz, M. 1985. “Citizenship with a Feminist Face: The Problem with Maternal Thinking.” *Political Theory* 13, No. 1.
- Harris, Anita. 2004. *Future Girl: Young Women in the Twenty-first Century*, Routledge: New York and London.
- Mouffe, C. 이보경 역. 2007. 『정치적인 것의 귀환』. 후마니타스.
- Pateman, C. 1988. *The Sexual Contrac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Thoburn, N. 2002. “Difference in Marx: The Lumpenproletariat and the Proletarian Unnamable.” *Economy and Society* 31, No. 3.
- Young, M. Iris. 1989. “Polity and Group Difference: A Critique of the Ideal of Universal Citizenship.” *Ethics* 99.

ABSTRACT

Social Polarization and Gender Democracy: An Interpretation on Candlelight Mass Meeting

Hyung-ik Choi | Hanshin University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new social movements through the last year mass candlelight rally did not appeared suddenly, but prepared by long time internal changes of Korean society. Above all, the gender democratic trend among them would have strong influences on the future Korean democratization process. Regardless of our appreciation on the event, the mass demonstration related with the import reopening agreement of the U.S. beef by Korean government, which doubts the infection of mad cow disease, can define that there happened a significant transformation upon the political agenda determined the democracy and political legitimacy including the rights of public health and sanitation. Therefore, as long as the candlelight rally as gender democracy and its political potential power for foods security and against globalization of diseases fails to reflect as political institutions, the crisis of representativeness in Korean politics seems to be inevitable.

Keywords: gender democracy, candlelight rally, social polarization, group intelligence, gender relations, life politics